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설립의 의의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센터장
hhcho@stepi.re.kr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도국 발전을 견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확인하고 학습하고자 국내 기관으로 방문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 수요를 토대로 개도국들이 내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갖추 수만 있다면 개도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이 내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산업인프라 부족뿐 아니라 정치 불안정 등 다양한 내부 문제로 인해 쉽지않은 않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많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 또한 이들 부족 숫자만큼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통합도 쉽지가 않다. 또한 전통적 지배계급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들이 많은 토지와 주요 시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의 지원이 적재적소로 안배되지 못하여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르완다의 사례를 보면, 해외에 나가있는 유능한 자국민(디아스포라)을 받아들이는 유인정책을 채택해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나라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과 세금우대 정책 등에 의해 디아스포라가 전체 르완다 기업인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는 디아스포라 활용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주요한 정책임을 알면서도 정권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귀국이라는 측면 때문에, 정권유지 차원에서 활용을 머뭇거리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국가를 버린 자”로 인식할 정도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개도국 원조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지원 범람(aid proliferation)이나 원조폭탄(aid bombardment)이 일어나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개도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특히 많은 선진국들이 거액의 자금을 개도국 발전을 위해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총인구에서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지만,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의 현실 때문에 이같은 목표 달성 가능성 자체가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개도국 지원이 사회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자금 제공으로 개도국과의 협력을 속도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은 국영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이익 창출보다는 국가의 정책 집행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선진국 및 국내 기업과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자국의 인력과 건설 중장비를 비롯한 많은 건축 및 수송 장비들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이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개도국 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국내의 고용불안도 해소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도 지원 대상국가 숫자와 함께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약 40~50년 앞서 시작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역량에 비한다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원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 분야에 참여하는 기관과 인력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도국들과 지원 국가들 간에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개혁의 동력이 자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거나, 후발자로서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사회인프라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 비중은 낮다.

이상과 같은 상황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개도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nternational Innovation Cooperation Center, IICC)를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개도국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장 비중이 적은 분야가 기술협력(technology cooperation)인데 반해서, 수원국은 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기술협력을 “개도국 국민의 지식이나 기술, 기술 노하우, 생산 활동에 관한 투자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술협력의 실제 내용이 개도국 인력을 자국 내에서 교육하거나 자국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기술협력 예산도 개도국 전체 지원 예산에서 몇 %에 불과한 규모이다. 또한 개도국들은 기술협력에서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술을 제공해도 이를 소화하여 혁신으로 연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에서는 이러한 개도국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향후 전략적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수의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기반이 갖추어지도록 장기간 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즉 협력국가의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IICC는 그 나라의 쌍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CC는 국내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우리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중점 개도국과 협력하고, 더 나아가 가능하면 선진국의 개도국 중점 지원기관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함께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IICC는 협력국의 내생적 성장 수요에 따라 통합적 관점(사업 기획, 물류, 기술 및 인력 확보, 자원 조달 등)과 라이프사이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 산업 육성의 경우, 산업화할 농산물 선정, 농산물 생산자로부터의 원료 취합을 위한 물류와 1차 저장 및 보관,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발굴과 기업화, 생산과 마케팅 등까지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의 타당성 조사와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단계는 전문기관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즉 IICC는 외생적 원조가 아닌 내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개도국이 추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기술혁신 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인프라효과 및 선봉효과(vanguard effect)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때 인프라효과는 기술혁신 인프라 정비가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이고, 선봉효과는 협력을 통해 개도국 정보 파악이 수월해짐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도국 투자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이다.

셋째, IICC는 개도국이 조직적인 지식창조를 할 수 있는 혁신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IICC는 궁극적으로 개도국과 우리나라 기업 간에 조인트벤처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어 개도국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도국 정부에게는 성장자본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혁신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허브기관이 되고자 한다. 실제 국내 여러 기관들이 개도국이나 협력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IICC는 모든 것을 하기보다 관련 산학연들을 잘 엮어주는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개도국 과학기술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다. **STEP1!!!**